



1946년 3월 창간 제 230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3일 (윤달 5월 10일) 월요일

광주 에너지밸리산단 행정절차 '잰걸음'

19일까지 산단계획 승인 위한 주민공람…내일 대촌동 주민센터서 설명회 개최

총 4500억 들여 147만m² 규모…국가산단 2019년 · 지방산단 2021년 조성예정

광주의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구축과 에너지 동력산업의 중심이 될 에너지밸리산단에 대한 행정절차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2일 "에너지밸리산단 지구지정과 산단 계획승인을 위한 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단 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로 산단 사업계획과 환경, 교통, 재해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주민공람이 이뤄진다. 4일 오후 2시에는 대촌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적조 방제 모의 훈련하는 여수시

지난달 30일 오후 여수시 남면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여수시 등 유관기관·어업인이 합동으로 황토 살포 등 적조 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예찰과 황토살포·수류방제, 가두리 이동, 치어 방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 귀어인구 3년 연속 전국 최다…40대↓ 54%

전남도, 통계청 발표 자료 분석…상대적 짚은 귀어인 전남지역 선호

전남 어촌으로의 귀어인구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어촌계 진입 장벽 등으로 전국에 929가구 1338명이 귀어해 2015년 991가구 1446명보다 62가구 108명이 줄었다.

반면 전남에는 345가구 502명이 귀어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늘어 정부 공식통계 발표 이래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 다음으로 충남 286가구, 경남 83가구, 전북 76가구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전남지역 귀어인은 40대 이하가 54%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49%보다 5%가 높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짚은 귀어인들이 전남지역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남지역 귀어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식 어장의 74%가 전남에 있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의 52%를 점유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흥군에서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귀어인에게 양식장 이용권을 우선 제공하는 등 귀어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몫 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귀어인이 전남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남이 명실 상부한 전국 제일의 해양수산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도시민이 전남 어촌으로 돌아와 꿈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이고 상세한 상담과 안내체계를 만들고, 물질적·기술적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Photo 漫評

사약

'과거 원조 시대라면 망한 정권, 원조에서 도승자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았느냐.'

김기준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8일 법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조사대 도승자에 비유하며 정권 몰락에 대한 책임을 통탄했다.

도승자는 조선시대 원의비서 기관인 승정원의 우두머리로 오늘날 대통령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현)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은 피고인신문 도중 "제가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받고 구속도 됐는데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 보좌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무너진 대통령을 보좌했는데 만약 특검에서 재판할 것도 없이 사약을 받으라고 한다면 깨끗이 미사고 끝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 사진=뉴시스

